

‘학동참사’ 4년, 사과는 없었다… 고개 숙인채 흐느낀 유족

4년 전 광주 학동 재개발 현장에서 일어난 철거 건물 붕괴 사고로 세상을 떠난 9명을 기리는 추모식이 열렸다.

광주학동참사유가족협의회는 9일 오후 광주 동구청사 앞에서 학동 재개발 4구역 붕괴 참사 4주기 추모식을 열었다.

추모식에는 유족을 비롯해 강기정 광주 시장과 임택 동구청장 등 내외인 100여명이 참석했다.

추모식은 사고 발생 시간인 오후 4시22분 묵념을 시작으로 헌화하고 추도사, 추모 공연, 애도의 시간 순으로 진행됐다.

세월호 참사 416 합창단과 대구지하철 참사 218합창단이 추모 공연을 준비, 제주 항공 여객기 참사와 이태원 참사 유족들도 참석해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다.

이날 학동 참사 유족들은 그날의 아픈 기억이 되살아난 듯 고개를 꼭 숙인 채 흐느끼거나 손수건에 얼굴을 파묻었다.

추모식에 모인 유족들은 HDC현대산업개발(현산)은 물론 사업 주체인 재개발 조합과 행정 당국을 향해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황옥철 유가족 공동대표는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행정 기관의 관리·감독 소홀도 있었다는 걸 분명 기억해야 한다”며 “광주시는 유족에게 많은 약속을 했으나 매년 여는 추모식을 제외하면 대부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황 공동대표는 “공사의 발주 주체인 학동 4구역 재개발 조합의 책임은 누구보다 무겁지만 4년이 지난 지금도 단 한 번 사과가 없었다”며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사



광주동구학동재개발4구역철거붕괴참사4주기를맞은9일오후광주동구청사앞에서열린추모식이열린가운데추모객들이헌화한뒤묵념하고있다. /뉴스시스

학동참사유가족협의회, 참사 4주기 추모식 열어 4년 흘렸어도 제자리… “재발방지·참사책임” 촉구 유족, 현산·재개발 조합·행정 당국에 책임감 강조

죄하고 유족 뜻에 따라 사회적 활동에 책임감 있게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진의 유가족 공동대표도 “우리는 끝없는 외면과 침묵, 무책임과 마주해야 했다. 책임을 회피하려는 권력과 맞서야 했다”며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물으며 다시는 이 같은 비극을 되풀이되지 않도록 끝까지 행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추도사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제1책임

완벽하게 이행하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한 이재명 대통령의 다짐이 가슴 깊이 다가온다”며 “광주에도 참사의 날을 잊지 않고 안전과 생명 중심의 안전도시 광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년 6월9일 오후 4시22분께 학동 4구역 재개발 철거 현장에서 무너진 지하 1층·지상 5층 건물이 승강장에 정차 중인 시내버스를 덮쳐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다.

/오권철 기자

보건의료노조 “이재명 정부, 공공병원 인력 규제 완화” 촉구

7개 국립대병원지부, 전남병원서 기자회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이재명 정부를 향해 공공병원의 인력 규제 완화와 예산 지원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 7개 국립대병원지부는 10일 오전 광주 전남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 환자를 책임졌던 지방 의료원은 여전히 정상화에 이르지 못한 채 업무 과중, 임금체불 격정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지난 정부의 잘못된 의료개혁 추진으로 인한 국립대 병원의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며 “지난해 의대 증원 반대를 이유로 시작된 전공의 집단 사직, 의대생 집단 휴업 등 의료 공백은 새 정부가 들어서도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의정 갈등 장기화 여파로 전국 국립대병원 적자는 1년 사이 두 배로 늘어나 10개 병원 적자가 5600억 원에 달한다”며 “국립대병원은 지난해 비상 경영에 돌입한 후 연차 축진제 도입과 인력 충원 중지 등 긴축 경영으로 노동자를 옥죄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바른 의료 개혁의 첫걸음은 공공의료와 지역요를 강화하는 것과 제대로 된 노동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공공병원의 지나친 인력 규제를 완화하고 예산을 지원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어 “각 병원장도 경영 위기를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며 “단체협약 위반과 연차 축진제 도입 등 노사 갈등의 원인이 되는 강요와 희생이



전국 보건의료노조 7개 국립대병원지부가 10일 오전 광주 동구 전남대학교병원 앞에서 ‘국립대병원 경영 위기 책임노동자 전가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를 향해 공공병원의 인력 규제 완화와 예산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시스

계속된다면 보건의료노조 국립대병원지부는 오는 7월24일 산별총파업으로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기자회견 참여 지부는 전남대병

원, 경상국립대병원, 부산대병원, 부산대치과병원, 서울대치과병원, 전북대병원, 충남대병원 등이다.

/전민규 기자

최근 10년간 육아휴직자 수 (명)

연도	수 (명)
'15	87,339
'24	132,535

성별 육아휴직자 수 (명)

연도	남성 (명)	여성 (명)
'15	4,872	82,467
'24	41,829	90,706

낮잠 자는 광주시 남성 육아휴직 조례

관련 사업은 0건... 박미정 시의원 지난해 사업 추진 전무

광주시가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도 관련 사업을 전혀 추진하지 않아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광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미정 의원(동구2)은 10일 열린 광주시 여성가족국 결산심사에서 “남성 육아휴직 조례가 시행된 지 1년이 넘도록 단 한 건의 사업도 추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2023년 대표 발의한 남성 육아휴직 장려 및 활성화 조례는 성평등 돌봄 문화를 조성하고 아버지의 육아 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제정했다.

박 의원은 “정책의 방향과 기반은 이미 마련했지만 광주시는 이를 실행할 의지가 없다”며 “성평등 돌봄의 첫

걸음인 남성 육아휴직 정책부터 제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0명으로 전국 평균(0.75명)에도 못 미치며 서울·부산에 이어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광주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지난해에만 2919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출생아 수는 2022년 7446명, 2023년 6172명, 지난해 6043명으로 감소하고 있다.

박 의원은 “출생률 반등은 단기 지원금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영유아기부터 학령기까지 아우르는 가정 중심의 전주기 돌봄체계 구축과 돌봄에 대한 공공 책임 확대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송현근 기자

제약사 영업사원에 숙박비·식사비 받아 챙긴 국립병원장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수사 460만원 수뢰 기소, 첫 재판 직위해제 병원장 “직무 관련 대가 아닌 친분으로 받은 돈”

제약사 영업사원으로부터 해당 업체 의약품을 써주는 대가로 숙박비·식사비 등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 전남 소재 국립병원 원장이 법정에 섰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10일 202호 법정에서 의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남 소재 모 국립병원 원장 A(63)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씨는 2019년 1월부터 2022년 1월 사이 4차례에 걸쳐 주식회사 고려제약 영업사원을 통해 의약품 채택·처방 유도 등 리베이트 성격의 460만원 상당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의사로서 임기제 공무원 신분으로 병원장이었던 A씨는 현재 직위해제 상태다.

검찰은 A씨가 병원 내 고려제약 제품 처방 또는 거래 유지 명목으로 영업사원의 법인카드도 부당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A씨가 영업사원을 통해 호텔 숙박비를 대납받거나, 식사비 명목의 현금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 법률 대리인은 돈을 받

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직무 관련성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A씨 측은 “영업사원의 상급자를 환자로서 만나 사적 친분이 있었다. 직무 관련 대가 또는 (의약품) 판매 촉진 목적으로 받은 돈이 아니다. A씨가 근무하는 병원은 약제 성분으로만 원내 처방할 뿐, 구체적인 의약품 선정은 도매상이 정한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12일 오후 재판을 다시 열어 A씨에게 돈을 건넨 제약사 영업사원 2명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한다.

A씨의 범죄 혐의는 고려제약의 전방위 리베이트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불법 리베이트 특별 단속을 벌였다. 경찰은 고려제약이 190여개 의료기관 의사 319명 등에 자사 의약품 써주는 대가로 42억원 상당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340명을 검거했다.

/이승원 기자

광전매일신문 기사제보 TEL 062-525-9775 FAX (062) 528-4566

(주)통일화물은 정성과 책임으로 늘 변함없이 고객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책임있는 물류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서는 (주)통일화물
나보다 고객을 먼저 배려하는 아주 특별한 만남
이제 (주)통일화물을 만나보십시오.

(주)통일화물이 힘찬 도약을 시작합니다

• 취급차량 : 1t~12t

• 중앙지 및 지방지 신문수송전문

• 정보지 · 신문 광고대행

• 광고전단지 운송 · 배포

• 일반이사 및 포장이사전문

• 기업물류 운송 전문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573-1번지 3층 ☎(062) 956-8500~2 Fax(062) 956-2001